

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1.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[안 제16조의 2] : 반대

가.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확대

□ 현행 및 개정안

- (현 행) 일정요건 충족시 수급사업자가 '중소기업협동조합(이하 조합)'을 통하거나 '직접'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가능
- (개정안)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'중소기업중앙회(이하 중앙회)' 추가하고 조합이 중앙회에 조정협의를 신청하면 중앙회가 대금조정 협의 가능

□ 문제점

- 현행 제도에서도 하도급대금 조정은 기업 간 자율적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
- 공정위의 최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수용한 응답 비율이 96%로 대부분 수용
- *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했다고 응답한 비율 : ('16) 96.0%→('17) 93.0%→('18) 94.0%→('19) 96.0% (공정위 각 연도별 하도급서면실태조사)
- 수급사업자 3개사 중 1개사(34.6%)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조사되어 대금 조정협의 제도 활용률이 높은편임
- * 수급사업자가 대금조정을 신청한 경우(34.6%), 이 중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.9% (공정위, '19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)

- 조정협의를 권자가 중앙회까지 확대되면 무분별한 조정협의 신청이 증가할 수 있고, 매출 규모가 작거나 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

-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대상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어 중견기업에 부담을 더욱 가중

*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 ('20.3월)

- 피출자·관계기업 등 매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도 매출액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회 등과 조정협의를 해야함

< 매출액 규모별 중견기업 현황 >

(단위 : 개사)

구분	기업수	1백억원 미만	1~5백억원 미만	5백~1천억원 미만	1~2천억원 미만	2~3천억원 미만	3~4천억원 미만	4~5천억원 미만	5천억~1조원 미만	1조원 이상
총계	4,635	1,214	891	611	893	396	207	105	208	110
규모 ¹⁾	2,228	52	70	250	830	396	207	105	208	110
피출자 ²⁾	1,254	643	419	171	21	0	0	0	0	0
관계 ³⁾	1,153	519	402	190	42	0	0	0	0	0

자료 : 통계청, '18년 기준 『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』 확정 결과, 2020.1월

1)규모 :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

2)피출자 :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을 30% 이상 소유하고 최대주주인 기업

3)관계 :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

- 중견기업의 51%(2,282개사)가 종사자 수가 1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인적·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

< 종사자 수별 중견기업 현황 >

(단위 : 개사,%)

구분	기업수	50명미만	50~100명 미만	100~200명 미만	200~300명 미만	300~500명 미만	500~1,000명 미만	1,000명 이상
총계	4,468 (100.0)	1,557 (34.8)	725 (16.2)	722 (16.2)	419 (9.4)	447 (10.0)	393 (8.8)	207 (4.6)

자료 : 중견련,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, 2020.3월

- 현행법에서도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임에도 대금조정 협의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반면, 중소기업의 조정협의에는 응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경영애로 심화 우려

- 중견기업은 원사업자이자 수급사업자*임에도 대기업 등에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없는 반면, 중소기업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이는 응해야하는 상황**

- * 중견기업 하도급 거래 현황 : 하도급 관계있음 50.1%
(최상위 원사업자 22.3% > 1차협력사 23.0% > 2차협력사 4.0% > 3차 이하 협력사 0.8%
중견련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
- **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정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, 위반하면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(하도급법 제16조의2, 제25조의3)

□ 건의 내용

- (1안)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앙회를 추가하기보다 현행제도 활용 등을 우선 검토 요청

- *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에 대금조정 협의와 중재 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 검토

- (2안)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중앙회 추가 시, ‘원사업자 단체’나 ‘원사업자이자 수급사업자 단체’까지 조정협의권자 확대

나.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사유 확대

□ 현행 및 개정안

- (현 행)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일정기준 이상 '상승'시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

→ (개정안)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 단가 인하 약정 체결 후, 납품 물량 변경 등의 '예상치 않은 사정'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'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

□ 문제점

- 신청사유의 확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이 증가 할 경우, 대금조정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경영 애로 증가 우려
 - 대금조정으로 인해 기업의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, 생산활동 축소, 실적악화 등의 경영피해를 줄 수 있음
 - 또한, 경영 불안정성을 키위 장기적으로 적극적 투자보다 방어적 경영전략 수립 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
- 기업 간 자발적 합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'계약 자유의 원칙'을 침해
 - '예상치 않은 사정'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의 사유를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계약의 안정성을 해치게 됨

□ 건의 내용

-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추가 반대

2.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(안 제35조의2) : 반대

□ 현행 및 개정안

○ (현 행) 신설

→ (개정안)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

□ 문제점

○ 현행 하도급법 제27조, 제35조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책임, 배상액 산정을 위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필요성이 낮음

- 공정위는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, 현장조사, 자료제출명령, 영치 등 법 위반행위의 조사가 가능 (공정거래법 제50조 준용)

-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(공정거래법 제57조 준용)

○ 일반 민사소송법에서도 소송 당사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한 문서제출의무를 제한적으로 적용

*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술,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

- 또한, 개정안이 표방하는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의 도입된 취지는 특허권의 기술적 복잡성 등으로 침해 증명이 어려운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, 광범위한 하도급 거래 적용에는 부적절함

□ 건의 내용

○ 하도급법상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반대